



E.L

## 독일의 최근 상황과 노동조합운동의 과제

에베르트재단의 초청으로 한국을 찾은 독일 노조간부와 노동관계 학자들이 연구소를 방문하여  
독일 노조운동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그 내용을 소개한다.

때 : 1999.10.1(금) 저녁

곳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사회: 이원보(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발표: 프랑크 타이히뮐러(Frank Teichmüller, 독일 급속노조 북연안지구 위원장)

하이너 헤셀러(Heiner Hesseler, 독일 브레멘대학 경제학과 교수)

루돌프 히髡(Rudolf Hickel, 독일 브레멘대학 경제학과 교수)

\* 정리: 인수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 주제발표

연구소와 노조간부들과 이렇게 만나고 의견교환을 하게 되어서 기쁘고 저에게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한다. 한국에 와서 한리중공업과 대우조선을 방문했었는데, 그 때에는 시간이 없어서 노조간부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해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 오늘 에베르트재단의 마이어 소장이 저희에게 부탁하기로는, 이 자리 를 벌어서 독일노조의 현황과 문제점을 말해 달라고 했다. 독일 금속노조에서는 다음 주 일요일에 4년마다 1번씩 열리는 총회를 갖게 되어 있다. 독일에서는 그 총회에서 많은 이야기와 토론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이번 총회에서는 세계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독일의 입장에서는 유럽연합과 화폐통합이 구체적인 현실이고, 점차로 다국적자본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운동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독일은 1990년에 철의 장막이 내려졌고, 아직 분단상황에 놓여 있는 한국과는 달리 통일이 됨으로써 다행히 긍정적인 상황에 있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독일사회 역시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기업 분할과 서비스업의 증가, 사회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평생직장 경향의 감소 현상

이 나타나고 있으며, 노동조합운동과는 역행하는 사회문화가 전반적으로 개인화되고 있다.

### 21세기에 맞는 노조를 고민한다

그래서 유럽노조들은 활동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도전에 대한 노조의 혁신이 있어야 하고, 금속노조도 개혁되어야 한다. 21세기의 노조는 20세기의 노조에 머무를 수는 없다. 자본은 점점 세계화되고 국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도 역시 국제화되어야 하는데, 노조도 성격이 다르다. 유럽의 경우만 해도 직업별노조도 있고 산업별노조도 있는데 이런 것을 극복하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이런 도전에 대해서 우리의 차이를 극복하고 국제적으로 서로 연대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자본은 각국의 노동자들을 적으로 보고 대처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도 기업을 동유럽(체코, 헝가리, 우크라이나)으로 옮기고 있어서 각국의 노동자들을 적으로 만드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만일 다국적 기업들이 세계화를 통해서 제일 낮은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찾아서 이전하게 되는 추세가 지속된다면, 노동자들은 결국 패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노조들이 좀 더 '정치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독일 노조들은 기업별노조가 아

니고 산별노조인데도 노조 내부에서 기업별 이기주의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점점 이렇게 되다 보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별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노조운동이 더 정치화되어야 한다. 저희들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최근에 조합원 수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옛날에는 대규모 제조업노조가 강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비교적 소규모인 서비스산업의 노동자가 증가함으로써 생기는 측면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노조가 어떻게 조직력을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또 대규모의 작업장의 경우에도 그 조직력을 강화하는 작업을 해 나가야 한다.

통일 이후에 저희들이 당면한 문제들이 몇 가지 있는데, 가장 심각한 것이 실업문제이다. 실업자가 많이 늘었고 고용 불안과 세수부족으로 인한 사회보장의 약화 등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이다. 현재 정치나 자본은 신자유주의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선전을 강화하고 있고, 많은 지식인들이 신자유주의 이론을 지원하고 있다. 세계교역이 늘어나고 자본이 세계화되는 상황 속에서 신자유주의적 이론에 매료되어서 '기업이 살면 나도 산다'는 식의 사고를 갖게 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자본은 국가도 없고 한 장소에 묶여 있지도 않으며 마우스만 누르면 몇 억이 오가는 상황인데, 노동은 생활에 구속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간의 국제적 연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자본이 경쟁력이 있어야 살아남는다는 생각은 수용해야 하지만, 노동도 역시 경쟁력이 있어야 산다는 식의 사고는 위험하다. 노동자는 사회보장과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 갖고 있다.

### 사민당에 대한 노조의 입장

지난 독일 총선이 있기 몇 해 전부터 우리는 장기간의 토론을 거쳤고 마침내 기민당정권을 누르고 사민당이 정권을 획득하는데 성공했다. 사민당의 슈뢰더 정부가 들어섬으로써 초반기에는 많은 법들이 우리가 생각한대로 개정되고 새 법이 입법되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노동을 위한 동맹' (alliance for work 독일식 노사정위원회)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하반기 들어서서 심각하게 문제 가 되고 있는 것이 연금보험의 문제이다. 독일사회가 고령화되고 있어서, 사회노동부장관인 발터 리스터가 견의한 바가 있었는데 관철이 되지 않았다. 그런 것에서 처음으로 정권 내에서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국가채무의 문제로 예산간 축정책으로 전환하는 상황을 맞았다. 그런 일들로 인해 지난 지방선거에서 사민당이 패배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을 겪었다. 선거 패배 이유는 첫째는 사민당정부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너무 커졌다. 발터 리스터 같은 사람이 사회노동부장관(노조출신)이 되는 등 정부에 대한 기대

독일사회 역시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기업 분할과 서비스업의 증가, 사회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평생직장 경향의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노동조합운동과는 역행하는 사회문화가 전반적으로 개인화되고 있다.

가 너무 커졌다. 기대가 너무 커기 때문에 그 후에 사람들의 실망감이 표로 나타난 것이다. 두 번째로는 사민당이 정권을 잡은 이후로 여러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노조와의 논의 없이 일을 추진하고 그 일 조차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세 번째, 결정적인 이유는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간취하는 부자들을 위한(예를 들면 함부르크는 유럽에서 가장 갑부들이 많이 사는 도시인데, 시장의 이야기로는 이 중 50%가 세금을 안낸다고 이야기한다) 정책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불신감을 더욱 가지게 되었다.

우리가(노동조합운동)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사민당에 정책을 의존할 수 없다. 좀 더 사민당정부와 대화를 많이 해서 우리의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노조가 정당을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조합원들의 정치성향은 다양하고 노동조합이 해야 하는 역할도 정당과는 독립적으로 존재

하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여러 번 신당들이 생기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독일에도 '제3의 길'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구체적으로 일, 즉 우리가 '노동을 위한 동맹'을 지속해나가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짧은 노동시간과 임업을 없애는 일 등의 구체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민당의 선거패배를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신자유주의적 노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그런 흐름들이 지금 강화되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협상의 장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위나 다른 활동을 통해서 대중들을 동원하고 그들이 개혁을 지원할 수 있게끔 하고 적극적으로 일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 토론

### 윤영모(민주노총 국제국장)

발표 중에서 '노동을 위한 동맹'은 내용상 '일자리 동맹'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노동을 위한 동맹'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면 좋겠다.

## 답변

독일의 '노동을 위한 동맹'이 의미하는 것은 한국의 '노사정위원회' 같은 것이다. 노사정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것이다. 단순히 '일자리 동맹'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노동을 위한 동맹'은 1990년에 금속노조에서 처음 제안한 것인데, 그 때는 기민당정부(콜 총리)가 거부하였다. 슈뢰더씨가 선거 때 이 점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선거에 승리한 이후에 이것이 현실화된 것이다. '노동을 위한 동맹'은 노사정이 똑같은 숫자로 만나는 중앙회의체가 있고, 그 밑에 자문기구가 있어서 지식인들이 참여할 수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도 이같은 종류의 회의체가 존재한다.

'노동을 위한 동맹'의 과제는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연금정책, 청소년 실업 문제, 조세문제, 재정문제들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는 장이다. 최근에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기업에서 견습공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약속이 어떻게 실행될지는 의문이다. '노동을 위한 동맹'이 가지는 의미는 국가가 맡아야 할 의무를 동맹에 맡겨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에 대한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커다란 문제이다.

## 루돌프 힉켈

'노동을 위한 동맹'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데는 저도 동감한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동맹 안에서 자본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윤을 일자리창출과 노동자들을 위해 얼마나 투여하게 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갖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속노조 위원장은 '노동을 위한 동맹'에서의 논의는 좋지만 그것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논의가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동맹이 성공한다면 저 역시 기쁘겠지만 그렇지 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콜 정권 당시에도 실시된 적이 있는데 자본가들이 이 정책에 동참하지 않아서 제대로 안된 경험이 있다. 지금 현황을 보면 그 때와 다를 바가 없다.

## 이일재(한국노동사회연구소 고문)

일단 1960년대에 독일에 갔었던 한국인 광부와 간호사들에게 독일노동조합이 많은 도움을 주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발표 중에 독일에서는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정당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노동자정당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 노동자 정당을 만들었다. 물론 노동자들의 정당 선택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한국 현실에서는 민주노총이 노동자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처해 있다. 독일 사민당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노동자정당에 도움이 될만

우리가 터득한 것은 노동운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두 다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나는 정치적 활동을 하는 사민당이고, 다른 하나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노동조합이다.

한 이야기가 있으면 들었으면 한다.

### 하이너 헤겔러

한국의 정치상황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다만 독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우리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사민당 내 토론을 거쳐서 우리가 터득한 것은 노동운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두 다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나는 정치적 활동을 하는 사민당이고, 다른 하나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노동조합이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의 재미있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아까 말씀드린 벌터 리히터 장관은 기존 생활철학은 군대도 가지 않고 평화주의적인 사람이었는데 코소보에 파병하는 것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실제 정권에 참여해서 활동하는 것과 현장에서 활동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누구든지 일단 권력을 잡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두 다리가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윤영모(민주노총 국제국장)

타이하필러 교수는 노동자 국제연대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였는데, 이야기 중에는 독일의 실업대체와 견습공 자리 확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최근에 독일이 한국의 조선산업에 대해 반덤핑 판정을 했고, 지금까지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의 노동조합들이 내세운 대안들은 실용주의적인 정책나일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 같다. 세계화에 대한 창의적인 논의들이 활발하게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가?

### 프랑크 타이하필러

제가 국제적인 연대를 이야기한 것은 그 연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한 것은 아니다. 제 생각에는 조선소라면 첫째가 예를 들어 그 조선소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보호하고 만들어 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노조가 조합원에게 다른 업체를 위해 우리가 일자리를 줄여야 한다는 요구를 할 수는 없다. 노조는 한편으로 자기 사업장 뿐만 아니라 지역과 국가 차원에서 다른 조선사업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독일의 경우는 국가 단위를 넘어서 유럽차원의 현황과 정책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하고 그

---

정책논의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유럽의 조선산업정책이라면 타국, 예를 들어 일본과 한국의 조선산업정책과도 연관되어 있고 한국도 이런 세계적 정책들과 함께 한다고 할 수 있다.

제가 말한 것은 자기가 처한 노동조건과 문제점들을 서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이다. 물론 노동자연대가 지금과 같은 경쟁시대에는 매우 힘들다고 생각한다. 또 이런 노조들의 활동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점차적으로 해결책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번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서로 논의하는 것도 이런 노동자 국제연대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 김형탁(사무금융노련 사무처장)

최근 사민당의 선거패배를 분석할 때, 사람들의 기대가 너무 커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자본가들은 신자유주의가 승리한 것이라고 선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적인 선거패배 이유는 오히려 사민당이 신자유주의적 노선으로 갔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은가?

#### 프랑크 타이하뮐러

지적하신 것에 동감한다. 독일의 사민당 안에도 많은 갈등이 있고, 슈뢰더정권이 기민당정권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는 생각이 선거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자본

가들은 우리가 옳기 때문에 사민당도 이런 노선을 따라오는 게 아니냐고 이야기하고 ‘노동을 위한 동맹’ 안에서도 기업 층에서 ‘노동을 위한 동맹’ 정책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게 만들고 있다.

#### 루돌프 희켈

보충설명을 하자면, 슈뢰더정권이 지금까지 한 일 중에는 그래도 괜찮은 시도가 있었다. 예를 들어, 세제개혁이 있다. 자본가들의 주머니에서 더 많은 돈을 끌어내기 위해 세제개혁을 시도했는데 자본가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쳤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하루 전에 거대기업 중의 하나인 독일의 알리앙스 보험회사(한국의 제일생명을 매입)가, 하루 전에 슈뢰더정부를 만나서 협박을 했다. 이 일로 인해 이 개혁이 실패한 바가 있다. 독일에서도 자본가의 영향력이 여전히 크고,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민당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다.

#### 이일재(한국노동사회연구소 고문)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방문하신 한라증공업만 하더라도 IMF 구제금융 시기에 이루어진 구조조정 문제로 노조가 투쟁하고 있다. 이런 일로 노조간부들이 잡혀가고, 246명이 체포되고 270여명이 수배되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에 반대한 정치파업에 반대한다는 이유이다. 독일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독일 노조간부들이 경찰에 잡혀가는 경우가 있는

### 조직력이 감소되고 있는 분야는

주로 제조업대기업, 남성노동자, 숙련노동자 부문이다. 우리가 주요 조직대상으로 삼는 것은 중소규모의 여성이나 비숙련노동자, 사무직노동자들이다.

지 알고 싶다.

#### 프랑크 타이하필러

한라중공업을 방문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경험했다. 공권력 투입에 대비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노조의 요구는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요구해야 하는 것이었다. 저희들은 경영진, 학자들과도 대화를 나누어 봤는데, 그들이 이야기는 독일노조는 평화적인데 한국 노조는 너무 전투적이라고 이야기했다. 저희는 오히려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가 노조를 그렇게 전투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고 되짚은 적이 있다. 한국과 같은 비슷한 상황은 독일의 제3제국 시대에나 있을 만한 일이고, 저희는 그런 상황을 겪어 본 적이 없다. 저는 지금 제일 앞장서서 파업에 나가고 있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 제가 위원장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 저희가 농성을 할 때, 회사측이 사업장 안에 못 들이가게 하면 우리는 경찰에 문을 열게 하라고 하고, 만일 밖에서 농성을 하게 되면 경찰이 2m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면 경찰이 올 때 잠시 2m 길을 만들어 놓은 후에 다시 농성을 계속 하곤 한다. 즉 노동조합과 경찰간의 협조

가 잘 되는 편이다. 투쟁할 때, 유일하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농성과 파업 시 회사시설이나 기물이 파손되는 것에 조심 한다.

#### 홍주환(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독일도 조합원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노동조합이 오랜 기간의 관성에 젖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우리도 노조조직 확대를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 조직화대에 대한 독일노동조합의 대책이 있는가?

#### 프랑크 타이하필러

조직력이 감소되고 있는 분야는 주로 제조업대기업, 남성노동자, 숙련노동자 부문이다. 우리가 주요 조직대상으로 삼는 것은 중소규모의 여성이나 비숙련노동자, 사무직노동자들이다. 이런 소규모의 사업장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에서 활동하면서 조직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 물론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니지만, 지금도 아주 작은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 이상학(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한국의 노동조합이 갖고 있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재정문제인데, 노동조합이 사회적 역할을 하고 싶어도 재정이 없기 때문에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기 어렵다. 노동조합운동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재정적 자원을 어떻게 조달하고 있는가? 조합비, 사업수익, 정부 등의 지원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또 독일노조들도 재정과 관련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 프랑크 타이하뮐러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독일은 산별노조체제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내는 모든 조합비가 산별노조로 간다. 조합비가 전체적으로 산별노조에 모이면 이 중 50% 정도가 현장으로 분배된다. 금속노조는 7개 지역이 있는데, 제가 있는 연안지구 같은 경우는 10%가 채 안된다. 나머지는 중앙에 남아서 인천비나 국제연대활동 등 본부노조 사업에 쓰인다.

예전에는 노조에서 몇 가지 사업을 했다. 주로 주택건설 사업, 실비로 주택임대사업, 보험회사나 은행, 소비조합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사업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일단 경쟁력이 없고 자본가와 경쟁 하려면 더 나은 자본가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포기한 상태이다. 지원금 같은 것은 전혀 없어서 노조의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역시도 인원 감축을 하고 있다. 특히 중앙본부의 인원을 감소

시키고 있고, 여태까지 노조에서 서비스 하던 것을 저렴하게 하기 위해 자동화와 합리화 노력을 하고 있고, 노조간 합병을 하고 있다. 금속노조도 섬유노조와 합병한 바가 있다. 우리가 일정한 재정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파업기금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84년 노동시간 파업시 5억 마르크의 파업비용이 들었다. 현재 조합원 수는 270만명이다.

저희가 한국에 와서 들으니, 한국의 노조전임자 월급을 사용자가 지급한다고 들었는데, 독일에도 그런 것이 있다. 독일의 종업원평의회(Works Council)가 그렇게 되어 있다. 종업원평의회 위원장이 주로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한국의 기업별노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 토론

노동조합의 자산소득이 1년간의 조합비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 프랑크 타이하뮐러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자산소득이 1년에 5천만 마르크(약 30억원) 정도가 있다. 1년 조합비는 약 8억 마르크(약 480억원)이다. 독일노총(DGB)의 재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지만, 독일 노동자들은 독일노총의 재정능력을 믿고 기쁘게 파업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노조전임자 월급을 사용자가 지급한다고 들었는데, 독일에도 그런 것이 있다. 독일의 종업원평의회(Works Council)가 그렇게 되어 있다. 종업원평의회 위원장이 주로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한국의 기업별노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 윤효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교육위원)

한국 노동조합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독일에서는 통일 전에 통일에 대한 정책이 어떤 것이었고, 통일 후에 노동자들이 느낀 점은 무엇인가?

### 프랑크 타이하뮐러

노조는 통일에 대해 대비한 적이 없고 통일에 대해 생각한 적도 없다. 전혀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통일이 왔다. 어제도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한국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갑작스럽게 통일이 오는 것보다 일단 노동시장도 정치 체계도 그대로 있다가 서서히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데, 통일이 되면 그런 의미가 무의미해진다. 한국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독일 같은 혼란과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통일 후 일부 동독 지역은 실업률이 20%에 이르렀다. 1년에 통일 비용이 1,500억 마르크(약 9조원)나 들었다.

통일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동서독 지역주민들은 서로 불신의 눈초리로 바라본다. '동독인', '서독인'이라고 서로 부르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불신감

이 노조 내에서 가장 작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하나가 된 것은 아니다.

### 충주환(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한라중공업 파업은 다른 파업에 없었던 성격이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같이 파업을 했다.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이 52.5% 정도 된다. 독일에서는 비정규직도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느냐?

### 프랑크 타이하뮐러

독일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비정규직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하지 않는다.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최근에는 용역업체를 대신해서 협상을 한 적도 있다.

### 사회

장시간 토론에 감사하고, 이 토론회가 독일과 한국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 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